▌ 예산정책연구 제9권 제3호 2020. 9. pp.163-186 https://doi.org/10.35525/nabo.2020.9.3.006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언:
오류총액에 대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이은경**

국문초록

2009년에 국가회계법이 시행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성된 국가재무제표는 기존의 단년도 방식의 단식부기 예·결산에서 파악되지 못했던 국가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줌에 따라 국가 재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9회에 걸친 결산에 따라 작성된 국가재무제표는 외부감사 등의 품질평가를 받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전체 부처의 오류총액을 집계하고,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의 오류발생 계정과 원인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2011~2019년 동안 총 200.1조원의 오류액이 집계되었고, 오류액은 일정하게 감소되거나 증가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국가재무제표의 오류가 통제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인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서 오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오류유형은 자산의 누락, 면적 혹은 금액 입력 오류 등 주로 국유재산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중앙관서와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감사원이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국가재무제표, 전기오류수정손익, 국가회계,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투고일: 2020. 8. 7. 수정일: 2020. 8. 26. 게재확정일: 2020. 8. 28.

*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2020. 7. 16.)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자는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 학술대회 토론자 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평가과장 (eunkylee@assembly.go.kr)

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9.1.1.자로 「국가회계법」을 시행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비로소 국가의 총자산, 부채 규모를 측정가능하게 되었다. 2011회계연도에 국가재무제표(재정상태표)를 통하여 최초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국가의 총자산은 1,525조원이며, 부채는 773조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52조원이다. 그런데, 정부가 재무제표를 통하여 제공하는 자산, 부채, 순자산, 프로그램원가 등의 회계정보가 유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을 가져야 하는데, 과거에 공시했던 재무정보에 오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재무제표에 보고되면 회계정보의 신뢰성 등이 훼손되어 회계이익의 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오광욱 등 2014).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국가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품질평가에 대한 연구가 다소 이루어져 왔으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기오류수정손익이나 회계처리상의 오류에 따른 재무정보의 품질저하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김봉환 등 2016; 정아름 외 2020).

한편, 국가는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활동은 국방, 치안 등의 국가의 유지에서부터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도로신설 등), 국민의 복지(저소득층 지원 등)등에 걸쳐있다. 정부는 다양한 재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세, 부담금 등의 조세를 통하여 징수하거나 보유하던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매각하거나, 채권(국채)을 발행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재정활동에 대한 결과물은 국가재무제표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 활동에 대한 결과물로서 국가재무제표가 국민, 국회는 물론 정책사업 집행자 등에게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총 9회에 걸친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재무제표의 오류 총액을 정밀하게 산출하고, 오류액 상위 4개 부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국가회계제도 및 국가재무제표의 유용성에 대해 기술하고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Ⅲ장에서

는 국가회계결산과 관련하여 오류총액을 집계하고,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에 대하여 오류발생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국가재무제표의 구성과 신뢰성

정부는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성과 중심의 체계적인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가결산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가회계법」 등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2009.1.1.일자로 시행하였다. 또한, 「국가회계법」에 근거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을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는 회계·기금의 자산과 부채 등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상태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 등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내역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총자산 중 정책사업에 활용되는 융자규모와 매년 융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의 규모의 측정이 가능하며, 사회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매년도 예산편성 결과, 연도 말 시점의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항만, 댐 등) 규모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추이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총자산과 부채의 추이분석을 통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등의 비용에서 국세수익, 비배분수익 등의 수익을 차감하는 구조로, 최종 산출물인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값이 양(+)이면,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 등에 따른 비용이 국세 등의 수익보다 많았음을 의미한다. 재정운영표는 국가가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에 투입된 원가를 측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연도별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와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기말순자산이 산출된다. 이와 같이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국가재무제표가 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재정건전성 확보

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재무보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하며,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의미하며,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다(삼일인포마인 2017).

결국,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회계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과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재무제표상의 회계수치가 그 측정대상의 크기를 잘못 나타내고 있다면 그러한 측정치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된다(삼일인포마인 2017). 따라서, 회계 상의 수치 오류 등은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우리나라의 국가회계와 관련된 법령인 「국가회계법」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및 국가회계기준 제4조(일반원칙)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주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목적적합성, 신뢰성, 이해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기간 간 비교가능성 등이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동법의 경우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질적 특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어떻게 질적 특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최연식 등 2016). 이와 관련하여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살펴본 결과, 재무정보의 근본적인 질적 특성을 목적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완벽한 표현의 충실성을 위해서는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재무제표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류의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무제표의 품질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무제표 상의 지속적 오류 발생은 신뢰를 저하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정부는 2011년 이후 총 9차례의 결산을 실시하여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원의 회계결산검사를 통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재무제표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주로 국가재무제표의 활용 제고와 관련하여 실증분석보다는 정책제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 본 연구와 관련성이 밀접한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 혹은 자산과 부채의 과소, 과대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국가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세부계정을 중심으로 국가재무제표 수치의 왜곡을 논의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김봉완 2013; 최연식 등 2017).

김봉환(2013)은 2010~2011년 단기미수채권에 대해 보고한 39개의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미수채권 대손충당금 비율의 중앙관서 간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외부감시가 높을수록, 보수적으로 회계보고를 하며, 재무정보 제공기관과 재무정보 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높을수록 정보이용자가 더 보수적으로 회계보고를 요구한다는 것 등을 밝히고 있다.

최연식 등(2017)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앙정부 부분의 우발부채를 사례로 국가회계 우발부채 회계처리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가결산충당부채 인식요건과 정부부문 특수성, 우리나라 재정환경 및 재정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반복지출 우발부채 항목들을 충당부채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장기적인 미래 자원 유출 전망 등과 관련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함으로써 국가부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국가재무제표 오류로 인한 신뢰성 문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김봉환 등(2016)과 정아름 등(2020), 김수성 · 최원석(2016) 등이 있다.

김봉환 등(2016)은 2011~2014년 동안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용해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분석하였다. 동 연구는 2011~201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분석기간 동안 결산 정보가 누락없이 제공된 38개 중앙부처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기간

---

1) 국가재무제표의 활용 제고를 위한 선행연구로 심재영 · 윤재원(2016)은 국가재무제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해설, 국가재무제표 Q&A 등의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정도진 등(2015)은 국가재무제표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국가결산보고서의 활용성 증대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동안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가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부처가 제외됨에 따라 국가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이 제외되어 있으며, 분석기간도 4년에 불과하여 오류금액의 추이분석에 한계점이 나타났다. 동 연구는 상대적으로 점차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해당 연구와 관련해서 2015년 이후에 오류 총액이 급증하거나 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재무제표의 정확성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정아름·정도진(2020)은 2011~2018년 동안 감사원의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분석을 통해 연도별로 지적되는 오류 금액의 불규칙성을 발견하고,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의 체계적 수행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동 연구는 감사원의 지적오류를 전수조사하고,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된 오류유형이 다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되는 주요 오류 유형 10가지에 대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결산 및 감사인원 하에서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총자산, 프로그램 총원가 등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제약 하에서 어떤 부처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항목에서 오류가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한된 자원 내의 효율적인 오류통제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수성·최원석(2016)은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라 기금 결산과 국가회계 결산을 상호 비교하여, 기금 결산 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회계 결산 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국가회계 실체의 하나인 연금기금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기금통합결산재무제표 작성 상에 발생하는 오류로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 교육 미흡, 계정과목 매핑과정 상등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논의하고 있으며, 국가회계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한 전문가의 검증 과정을 강조하였다. 동 연구는 연금기금 분석사례를 통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였지만, 중앙부처 중에서도 특정 부처의 기금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전체 부처에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을 최초 재무제표 작성연도인 2011년부터 2019년까지로 설정함으로써 9년 동안의 오류금액의 추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 등에서 일부 부처에 대한 오류액을 측정하거나, 감사원의 지적건수 등에 한정된 부분을

국가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전체 부처를 망라하는 오류총액을 집계하였다. 즉, 오류총액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익을 포함하는 전체 부처에 대한 재무제표의 오류총액을 집계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했던 오류총액 상위 부처의 오류액을 집계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재무제표 항목을 규명함으로써 제한된 결산 및 결산검사 인원으로 효과적인 오류통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존연구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국가재무제표의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국가재무제표의 오류총액 분석

1. 분석대상 및 평가방법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 중 하나인 신뢰성은 오류크기로 측정이 가능하다. 즉,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과거기간 동안에 신뢰할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 혹은 왜곡표시된 오류항목은 재무제표 신뢰성 측정을 위한 대용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 신뢰성의 주요 분석지표로 국가재무제표의 오류금액을 사용하며, 오류금액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따른 부처별 회계오류 수정금액(이하 '감사원 수정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구성된다. 이 때, 감사원 수정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의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결산 검사과정에서 발견하여 수정한 오류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재무제표가 확정된 것을 의미하며,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회계처리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화를 수반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은 오류총액으로, 2011~2019년도 기간의 54개 중앙관서(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의 재정운영표에 반영된 전기오류수정손익과 국회에 최종적으로 제출되기 전의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의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오류사항을 합산하여 산정하였다.

다음으로 산정한 오류 금액에 대해 부처별 비교를 수행하고, 계정별로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때, 분석은 부처별, 계정별 오류 금액의 발생원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그 분석 방법으로는 해당 부처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서면질의를 기반으로 한 질적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분석기관 및 기간	분석대상	분석내용	분석방법
2019년 말 기준의 54개 중앙관서 2011~2019	국가 재무제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① 전체 부처의 오류금액 ② 오류발생 상위 4개 부처별 계정별 오류금액 감사원 수정사항, 전기오류수정손익	질적분석 (부처 담당자와 인터뷰 및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서면질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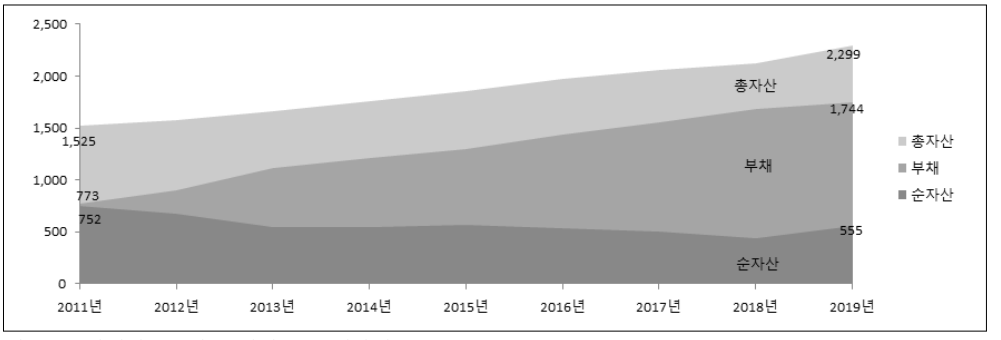
2. 국가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 추이(2011~2019)

본 연구의 심층 분석에 앞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2011~2019년도의 국가재정상태 및 국가재정운영 추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1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의 국가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의 부채는 1,744조원으로 2011회계연도의 부채 773조원 대비 971조원 증가하였다. 그런데, 2011~2019회계연도 동안 자산은 774조원 증가하는데 그쳐 국가의 순자산은 2011년 752조원이었던데 반해 2019년도 197조원이 감소하는 추세로, 부채를 중심으로 국가의 총자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국가재무제표 상의 총자산, 부채, 순자산 추이 현황

(단위: 조원)



자료: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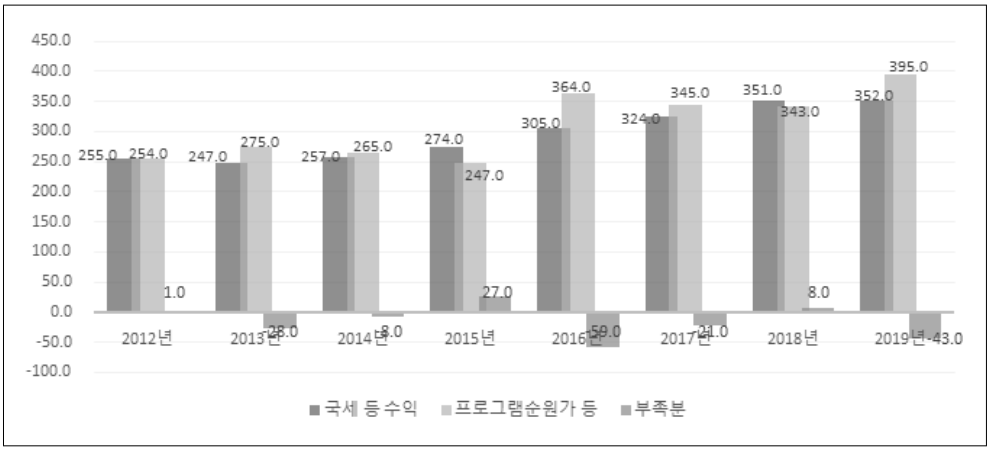
최근 8년 동안의 국가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재정운영 규모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 프로그램원가 등의 비용은 254조원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395조원으로 55.5%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세 등의 수익은 2012년 255조원에서 2019년에 352조원으로 38.0% 증가하고 있다.

8개 연도 중 국세 등의 수익이 프로그램원가 등의 비용을 초과하는 해는 2012년(1조원), 2015년(27조원), 2018년(8조원) 3년에 그치고 있으며, 2013~2014년, 2016~2017년, 2019년에는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고 있다. 2012~2019년 동안 누적적으로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규모는 123조원이다.

국세 등으로 프로그램순원가 등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여 재정운영결과는 누적적으로 손실(원가가 수익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익의 부족분을 차입부채 확대 등을 통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2] 국세 등의 수익, 프로그램 순원가 등 추이 현황

(단위: 조원)



자료: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3. 분석결과

가. 국가재무제표 오류총액 분석

2011~2019년 동안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의 수정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합계액은 총 200.1조원이며, 총 9회의 결산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되지 않고 매

년 평균적으로 22.2조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체 오류수정액이 일정한 추세(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 수정사항은 2011~2019년 동안 총 118.7조원 발생하였으며,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감소하다 2016년에 다시 2014년보다 많은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4.2조원, 16.5조원의 오류수정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11~2019년 동안 81.4조원 발생하였고, 2012년 이후 증가추세이던 수치는 2014년에 13.6조원까지 확대된 이후 감소추세이다가 2017년에 15.9조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또한, 2019년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6.9조원인데, 이는 최저치인 4.4조원보다 여전히 높다.

[표 2] 최초 재무제표 개시 이후 국가재무제표의 오류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감사원 수정사항	18.6	18.5	15.4	11.9	7.0	12.5	4.1	14.2	16.5	118.7
전기오류수정손익	0	12.6	4.4	13.6	11.9	7.3	15.9	8.8	6.9	81.4
합 계	18.6	31.1	19.8	25.5	18.9	19.8	20.0	23.0	23.4	200.1

자료: 중앙부처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1년에는 부처별로 수정금액을 파악하지 못하여 2012~2019년 동안의 감사원 수정사항을 집계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총 33조원, 방위사업청에서 14.2조원, 국방부에서 11.9조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4조원, 해양수산부에서 6.8조원 등의 수정사항이 발생하였다. 감사원 수정사항은 주로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등의 자산이 많은 부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표 3] 부처별 감사원 지적에 따른 수정사항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국토교통부	과대	△2.0	△0.9	△0.1	△0.2	△2.6	△0.9	△2.5	△3.4	△12.6
	과소	2.7	1.3	1.3	0.8	6.3	1.0	4.3	2.7	20.4
	합계	4.8	2.2	1.4	1.0	8.9	1.9	6.8	6.1	**33.0**
방위사업청	과대	△0.1	△0.4	△0.5	△0.3	△0.5	△0.5	△0.4	△3.6	△6.1
	과소	2.5	1.4	0.0	0.1	0.5	0.1	0.1	3.3	8.1
	합계	2.6	1.8	0.5	0.4	0.9	0.6	0.5	6.9	**14.2**
국방부	과대	△2.0	△1.3	△0.8	△0.6	△0.1	△0.2	△0.8	△0.2	△6.1
	과소	1.3	1.2	0.3	1.3	0.2	0.2	1.0	0.3	5.8
	합계	3.3	2.5	1.1	1.9	0.3	0.4	1.9	0.5	**11.9**
해양수산부	과대	0.0	△0.1	△0.8	△0.2	0.0	△0.2	△0.8	△0.8	△3.0
	과소	0.0	0.7	0.5	0.1	0.1	0.3	2.0	0.2	3.9
	합계	0.0	0.9	1.3	0.3	0.1	0.5	2.8	1.1	**6.8**
농림축산식품부	과대	△0.1	△1.7	△0.3	△0.5	0.0	△0.1	△0.1	0.0	△2.8
	과소	0.1	0.1	1.4	0.0	0.7	0.0	0.1	0.1	2.5
	합계	0.2	1.8	1.8	0.5	0.7	0.1	0.2	0.1	**5.4**
교육부	과대	△0.2	△0.3	△0.7	0.0	0.0	0.0	0.0	0.0	△1.2
	과소	0.3	0.2	2.8	0.0	0.1	0.0	0.0	0.8	4.1
	합계	0.4	0.5	3.5	0.0	0.1	0.0	0.0	0.8	**5.3**
기타부처	과대	△5.4	△2.7	△0.9	△1.5	△0.8	△0.4	△0.7	△0.3	△12.6
	과소	1.8	2.9	1.5	1.4	0.7	0.2	1.3	0.9	10.7
	합계	7.2	5.6	2.4	2.8	1.5	0.6	2.0	1.2	**23.3**
총합계	과대	△9.7	△7.5	△4.0	△3.2	△3.9	△2.4	△5.3	△8.3	**△44.4**
	과소	8.8	7.9	7.9	3.7	8.5	1.7	8.9	8.2	**55.5**
	합계	18.5	15.4	11.9	6.9	12.5	4.1	14.2	16.5	**99.9**

자료: 중앙부처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감사원 수정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부처는 전기오류수정손익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감사원 수정사항이 많이 발생하면서 전기오류수정손익도 많이 발생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로 나타났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기오류수정이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의 합계액을 의미하는데,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2012~2019년 동안 30.2조원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국방부는 동 기간 동안 25조 4,117억원의 전기오

류수정손익이 발생하였다. 동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에서는 8조 3,525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3조 6,672억원, 농촌진흥청은 1조 7,386억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였다.

[표 4] 부처별 전기오류수정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국토교통부	전기오류수정이익	17,759	6,308	49,944	45,992	7,089	4,435	7,910	13,897	153,334
	전기오류수정손실	17,027	4,518	10,004	21,573	13,130	44,202	19,022	19,386	148,862
	합 계	34,786	10,826	59,948	67,565	20,219	48,636	26,932	33,283	302,195
국방부	전기오류수정이익	27,669	18	20,507	10,861	17,676	50,165	10,486	7,062	144,444
	전기오류수정손실	30,349	676	22,512	7,934	2,958	30,612	8,649	5,983	109,673
	합 계	58,018	694	43,019	18,795	20,634	80,777	19,135	13,045	254,117
해양수산부	전기오류수정이익	0	12,888	4,242	4,395	1,682	1,831	28,706	1,337	55,081
	전기오류수정손실	0	1,775	3,040	2,466	2,906	2,225	4,855	11,177	28,444
	합 계	0	14,663	7,282	6,861	4,588	4,056	33,561	12,514	83,525
농림축산식품부	전기오류수정이익	2	0	10,556	402	243	3,350	762	436	15,751
	전기오류수정손실	757	0	463	620	2,775	15,089	835	382	20,921
	합 계	759	0	11,019	1,022	3,018	18,439	1,597	818	36,672
농촌진흥청	전기오류수정이익	82	14	72	8,429	59	16	5	12	8,689
	전기오류수정손실	155	149	17	8,333	35	5	2	1	8,697
	합 계	237	163	89	16,762	94	21	7	13	17,386
소계	전기오류수정이익	45,512	19,228	85,321	70,080	26,749	59,797	47,869	22,744	377,300
	전기오류수정손실	48,288	7,118	36,036	40,926	21,804	92,134	33,363	36,929	316,598
	합 계	93,800	26,346	121,357	111,006	48,553	151,931	81,232	59,673	693,898
전체부처	전기오류수정이익	59,116	27,648	89,986	75,385	36,857	63,868	50,335	25,850	429,045
	전기오류수정손실	67,053	16,297	46,310	43,945	35,818	95,339	37,966	42,743	385,471
	합 계	126,169	43,945	136,296	119,330	72,675	**159,207**	88,301	68,593	814,516

자료: 중앙부처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2012~2019년 중 가장 많은 금액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한 2017년도를 기준으로 부처별로 오류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2017년 인식한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기오류수정손익규모는 각각 총자산의 3.9%, 2.9%에 이르고 있어, 결코 낮은 수치라 할 수 없다.

[표 5] 2017회계연도 주요 부처별 총자산 대비 전기오류수정손익

(단위: 억원, %)

구분	국방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합계
전기오류수정손실	30,612	44,202	15,089	5,436	95,339
전기오류수정이익	50,165	4,435	3,350	5,918	63,867
합 계	80,777	48,637	18,439	11,354	159,207
총자산	2,049,523	6,350,627	643,778	11,581,226	20,625,154
비 중	3.9	0.8	2.9	0.1	0.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금액에 대한 중요성 금액을 산출하지 않지만, 오류금액의 중요성을 산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리 및 회계조사 결과 발견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중요성 판단산식을 기준으로 부처별 전기오류수정손익, 총자산, 순원가 등을 대입하여 중요성기준 금액 등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국방부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중요성 기준비율의 8.27배, 농림축산식품부는 5.03배이며, 국방부는 Ⅱ단계, 농림축산식품부는 Ⅲ단계 수준으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재무제표에서 미치는 영향이 낮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전기오류수정손익 상위 4개 부처별 중요성 기준금액 및 중요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기오류수정손익(a)	48,637	80,777	18,439	4,056
2017회계연도말 자산총계	6,350,627	2,049,523	643,778	269,944
2017회계연도 순원가	157,668	393,398	89,005	31,709
규모금액(b)	3,254,148	1,221,461	366,392	150,827
규모조정계수(c)	5	5	4	4
규모비율[d=a/(b/c)]	7.47	33.06	20.13	10.76
중요성기준비율(e)	4.00	4.00	4.00	4.00
중요도기준비율대비 배수(d/e)	1.87	8.27	5.03	2.69
중요도 기준	Ⅴ	Ⅱ	Ⅲ	Ⅳ

주: 1) 규모금액은 기말 자산총계와 순원가의 평균 금액임.
2) 규모조정계수는 규모금액 구간별로 0.4~5까지임
3) 규모비율은 전기오류수정손익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 계상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중요성 판단기준 비율을 4%로 적용함.
4) 중요도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관련 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로 산출되며, Ⅰ단계(16배 이상), Ⅱ단계(8~16배), Ⅲ단계(4~8배), Ⅳ단계(2~4배), Ⅴ단계(1~2배)로 갈수록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총자산 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음을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음의 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첨2〉 '감리결과조치양형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법정도에 따른 중요도 단계별 조치기준(회사 및 임직원)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국방부의 경우 중요도는 II단계이며, 오류금액이 고의에 의한 경우,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한 검찰고발까지 가능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하지 못하여 감사인 지정을 받게 하고, 증권발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정도로 사안이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요도 III단계의 경우는 II단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감사인을 지정받아 재무제표 감사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사항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감리결과조치양형기준'의 조치기준에서 감사인의 지정과 담당임원의 해임까지도 가능한 낮지 않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표 7] 감리결과조치 양형기준

중요도	기본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I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II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III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IV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경고
V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주의

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시행세칙」

나.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의 오류발생 주요 계정 심층분석

국가재무제표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의 오류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부처별 담당자와 인터뷰 및 서면질의를 실시하였다.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의 오류발생 원인은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의 오류, 사실의 누락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주요 오류는 부동산(토지, 건물 등)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오류수정 유형 및 사례

구분	오류 사례
추정의 오류	- 대손충당금 과소 추정 - 소송충당부채
계정분류의 오류	- 건설중인 자산 본계정 대체 - 자본적 지출(자산) 인식
계산의 오류	- 토지면적 오류에 따른 재평가 오류 - 자산가액 입력 오류
사실의 누락 등	- 토지의 재평가 누락 - 토지 및 건물가액 오류 - 토지 등의 이중등재 - 건설 중인 자산 누락 - 사회기반시설(고속국도, 공항, 국도, 철도 등) 누락

자료: 중앙부처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의 총자산 구성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비중이 높았다. 부처별 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의 총자산 중에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65.3%이며, 국방부의 경우에는 총자산 220.9조원 중 210.6조원(95.3%)가 일반유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는 일반유형자산(6.7조원)과 사회기반시설(21조원)이 총자산 31조원 중 89.4%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과 농촌진흥청의 경우 토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유형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8.1%, 99.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4개 부처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자산 중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적정성이 강조되는 부처라고 할 수 있다.

[표 9] 2019년 말 현재 오류총액 상위 4개 부처의 자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일반유형자산(a)	사회기반시설(b)	총자산(c)	비중(a+b)/c
국토교통부	131.1	306.3	669.4	65.3
국방부	210.6	0.0	220.9	95.3
농림축산식품부	44.7	0.0	64.3	69.5
해양수산부	6.7	21.0	31.0	89.4

주: 내부거래 전 금액임
자료: 각 부처의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체 부처 중 국토교통부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처인데,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오류수정이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2017년에 7,885억원의 출자금 관련 오류를 제외하고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오류수정사항은 대부분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국토교통부 자산, 부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자산	일반유형자산	21,630	6,816	40,061	26,159	11,026	105,692
	사회기반시설	44,986	9,371	16,867	804,398	43,864	919,486
	기 타	1,345	3,142	△5,730	1,295	4,674	4,726
	소 계	67,961	19,329	51,198	831,852	59,564	1,029,904
부 채		△3	890	449	3,331	211	4,878
순자산 변동		△392	0	△3,755	△808,252	△26,228	△838,627
합 계		67,566	20,219	47,892	26,931	33,547	195,155

자료: 국토교통부

국방부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최근 5년 동안 총 15.2조원이며, 이는 대부분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군수자산과 시설자산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주로 시설자산에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이들 시설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6.8조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였다. 2019년의 경우에도 전년도 시설자산 전수조사 및 전군 군수품 재물조사 후속조치 및 회계처리 오류정정을 통하여 전기오류수정손익이 1.3조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국방부 자산, 부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전기오류 수정이익	군수	5,044	1,148	2,036	693	126	9,047
	시설	5,629	14,402	48,132	7,192	6,279	81,634
	재정	188	2,126	△3	2,601	657	5,569
	소계(a)	10,861	17,676	50,165	10,486	7,062	96,250
전기오류 수정손실	군수	16,067	160	2,171	2,354	229	20,981
	시설	1,766	1,694	20,640	1,985	3,752	29,837
	재정	△9,899	1,104	7,801	4,310	2,002	5,318
	소계(b)	7,934	2,958	30,612	8,649	5,983	56,136
합계(a+b)		18,795	20,634	80,777	19,135	13,045	152,386

자료: 국방부

해양수산부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토지, 건물, 구축물 등의 자산계정에서 2015~2019년 동안 총 6조 1,580억원 발생하였다. 기타로 분류된 전기오류수정손익에는 건설중인 자산 오류, 누락 재산 등재 및 입력 오류, 물품 누락재산 등재 및 입력 착오 오류 수정분 등이 반영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앞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에서와 같이 일반유형자산 등을 중심으로 한 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해양수산부 자산, 부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단위: 억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전기 오류 수정 이익	토 지	1,624	1,838	13	△1,277	2,248	4,446
	토지사용권	0	0	0	24,414	2,464	26,877
	건 물	59	78	13	16	4	170
	건물사용수익권	△11	0	0	917	△135	771
	구 축 물	745	781	798	390	1,946	4,660
	구축물사용수익권	0	0	0	1,974	1,944	3,918
	기 타	49	208	1,402	△21,579	2,706	△17,214
	소 계(a)	2,466	2,906	2,225	4,855	11,177	23,629
전기 오류 수정 손실	토 지	2,449	1,810	1,280	13,300	2,326	21,165
	토지사용권	△111	0	0	2,249	1,151	3,289
	건 물	1,240	38	113	28	20	1,439
	건물사용수익권	△137	0	0	108	84	55
	구 축 물	301	664	281	2,038	902	4,187
	구축물사용수익권	△419	0	0	2	171	△247
	기 타	1,073	△830	156	10,980	△3,316	8,063
	소 계(b)	4,395	1,682	1,831	28,706	1,337	37,951
합계(a+b)		6,861	4,588	4,056	33,561	12,514	61,580

주: 2019년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는 프로그램원가에 배부한 금액을 포함함

자료: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2019년 동안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일반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2015~2019년 동안 전기오류수정이익 발생분은 토지의 단순입력착오에 따른 오류수정, 과거 공시지가 수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오류수정손실은 말소된 토지가 국유재산대장에는 등재되어 있거나, 토지가 이중으로 등재됨에 따른 오류수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7년 전기오류수정손실 발생분 1조 5,089억원 중에는 기획재정부의 국유대장 정비사업(조달청 위탁사업)을 통하여 국유재산대장 상에 등재되었지만 말소되거나 이중으로 등재된 토지 정리에 따른 전기오류수정손실분이 1조 4,91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13] 농림축산식품부 자산, 부채별 전기오류수정손익

(단위: 억원)

구분		수정사유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기오류 수정손실	토지	말소, 이중등재 토지 정리	592	2,770	14,918	726	346
		과거 공시지가 수정	17	2	133	96	1
		소 계(a)	609	2,771	15,051	822	347
	기 타(b)		11	4	38	13	35
	합 계(c=a+b)		620	2,775	15,089	835	382
전기오류 수정이익	토지	입력착오 오류수정	0	25	2,791	499	207
		누락재산 등재	209	131	80	50	68
		과거 공시지가 수정	165	6	381	198	9
		소 계(d)	374	161	3,252	747	284
	기 타(e)		28	82	98	15	152
	합 계(f=d+e)		402	243	3,350	762	43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오류금액은 국유재산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누락, 중복 등의 오류가 발생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재무제표가액을 신뢰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산 등재 등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비로소 국가의 총자산, 부채규모의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가 매년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를 측정하고, 국세, 부담금 수익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재정상태와 연도별 재정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1~2019년까지 총 9회에 이르는 결산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무제표에서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오류의 발생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총 9회에 걸친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재무제표의 오류 총액을 산출하고, 오류액 상위 4개 부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오류의 발생원인 등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2019년 동안 국가재무제표의 오류 총액은 총 200.1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오류액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며,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오류총액이 높은 상위 4개 부처인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부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이 총자산의 65.3~89.4%에 이르고 있다.

셋째, 오류수정의 대부분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자산가액 입력오류, 말소된 토지 혹은 이중 등재된 토지 정리, 토지 재평가 누락, 토지면적 오류 등을 조정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실제 존재하는 자산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는지, 재무제표에 반영된 자산이 실제로 존재(부존재, 면적상이 등)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오류가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재무제표가액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감사원의 회계결산 검사의 정교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60조(결산검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 기능을 해석하면 왜곡표시에 대한 사항을 적발하는 것으로, 국가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제시 및 이에 따른 책임성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2] 이는 감사원의 회계결산 검사를 거친 국가재무제표에서 또 다른 오류의 발생이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나 제도 개편을 통해 감사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제시 권한 등에 대해 고려하여 감사원의 회계결산 검사의 정교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재무제표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정확성을 증가하기 위해 담당자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국가재무제표의 경우 회계적인 지식 및 재정 사업, 국가 예·결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의 업무 이해 부족, 절차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도 적지 않은 상황으로,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 결산검사로 인한 수정사항과 전기오류수정손익을 합한 오류총액을 최초로 집계하고, 오류금액이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경우,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국가재무제표의 오류에 대한 원인분석을 수행하였다는 데 한계를 지닌다. 앞으로 국가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다양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의 정확성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국가재무제표의 투명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

2) 감사원은 결산검사 시 왜곡표시에 대한 사항을 적발하면 될 뿐, 감사의견을 표명할 정도의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원의 회계결산 검사를 거친 국가재무제표에서 또 다른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알기쉬운 국가회계 20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기획재정부 · 한국재정정보원, 「2019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기획재정부, 2019.

국회예산정책처,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Ⅰ」, 국회예산정책처, 2018, 265~312쪽.

김봉환, “국가재무제표 상 미수채권대손충당금 비율의 중앙관서간 차이 분석,” 「재정학연구」 제6권 제3호, 2013, 31~60쪽.

김봉환 · 최윤정, “국가재무제표 재정운영표상의 비용 배분이 개선되고 있는가?: 비배분비용을 중심으로,” 「회계연구」 제18권 제4호, 2013, 303~325쪽.

김봉환 · 한승엽,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 추세에 관한 연구: 회계오류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5권 제5호, 2016, 169~208쪽.

김수성 · 최원석, “기금의 국가회계 통합 결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연구: 결산시 오류 발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5권 제2호, 2016, 153~179쪽.

대한민국 정부, 「2011~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대한민국 정부, 각 연도.

오광욱 · 마희영,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액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56집, 2014, 20~38쪽.

삼일인포마인, 「계정과목별 일반회계와 세무해설」, 삼일인포마인, 2017.

심재영 · 윤재원, “국가재무제표의 활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주된 정보 이용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제30권 제1호, 2016, 87~122쪽.

정도진 · 김종현 · 마성민, “국가결산보고서 활용성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60집, 2015, 231~256쪽.

정아름 · 정도진, “감사원 결산검사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오류유형 분석 및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38권 제2호, 2020, 159~185쪽.

최연식 외, “국가회계 우발부채 회계처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반복지출 우발부채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6권 제6호, 2017, 365~390쪽.

최연식 · 박진하 · 권대현,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의 공공부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우리나라 국가 재무보고관련 규정체계의 비교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17권 제2호, 2016, 193~222쪽.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2019.

Evaluation on Relia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Lee, Eunkyung*

Abstract

After the National Accounting Act was first enforced in 2009, the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with its standard from 2011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government financial activities as they effectively show the financial status and operational results of the country that were not identified in the existing single year single entry budget and account system.

However, from 2011 to 2019,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according to the nine settlement of accounts written every year are submitted to the government Assembly without the quality evaluation such as external audits.

In this study, the reliability of the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was assessed by aggregating the total amount of errors in all ministries from 2011 to 2019. As a result of analysis, a total of 200.1 trillion won of errors were aggregated over 2011-2019 period. The amount of errors in the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occurred irregularly without a constant decrease or increase. An analysis of the error-causing account of the top four ministries showed that errors occurred intensively in general tangible assets and social overhead capital. Those error types are mainly related to government properties, such as omission of assets, errors in area or amount input, and failure to reflect revalued assets. This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hich conducts the settlement inspection, should actively devise a specific plan to improv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s.

□ Keywords: Government Financial Statement,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 Government Accounting, General Tangible Asset, Social Overhead Capital

---

* Director, Public Institution Evaluation Division,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